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26.4.6.)
- ②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26.4.6.)
- ③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26.4.10.)
- ④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26.4.13.)
- ⑤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26.4.14.)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채용, 앞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근무 비공무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 제정, 시행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령은 오늘(6일) 제정되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 훈령 주요 내용 >

■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까지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
-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가점·우대사항,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 수립 또는 공고내용 변경 등 공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 채용점검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해당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채용권자는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함
- 채용비리 발생시 다음 순위자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전형 후에 실시하는 다음 전형에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최종 전형에서 채용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비공무원 채용 규정이 이번 훈령에 맞게 정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4.6~5.6) 운영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빈발...신고문의 ☎1398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익 편취
- ▲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도 않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편취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제도 만든다”,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출범

- 국민권익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 위촉
-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법조문 운용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자문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 소관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2022년에 처음 출범했다.

□ 이번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반부패 사안에 관하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 운영 방안 및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반부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위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리경영이 곧 조직의 경쟁력!”,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 모집 실시

- 국민권익위,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 시작…오늘(13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
- 사업 선정 기관·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우수 성과기관 포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준수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체계로서, 기반구축, 부패위험요소 관리·예방 및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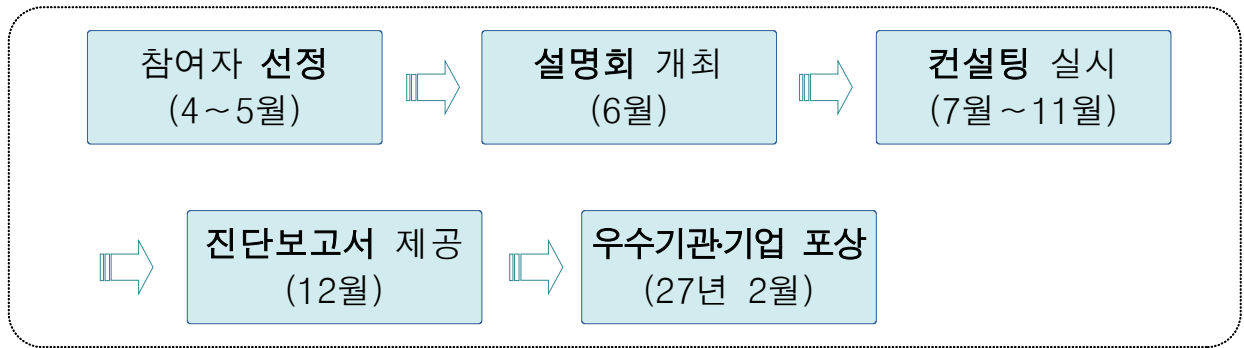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2년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이래 매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 10개 내외의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기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가이드라인 제시 등 체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대상별 진단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의 경우 올해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그리고 사업 종료 후 윤리경영 체계 정립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행 절차〉



-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지된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조직 내 잠재적 부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한 단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4.14.~ 5.13.) 운영
- 고유가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 및 복지 취약계층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민생현장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통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시장교란행위 예시 〉

-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 ※ 위 신고대상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임

-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 까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협약체결→기부(공공기관)→위기가정 발굴(위원회)→긴급 생계비 지원(사회복지협의회)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